

# 우리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주관성연구: 가설발견의 Q방법론을 활용하여

## The Subjectivity Study on ‘The Corruption’ of Our Society: Using the Q methodology of Hypothesis Abduction

이도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Doh-Hee Lee(2dohee@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가장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무엇인가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성연구’ 또는 ‘Q방법론’이라고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부정부패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즉, 부정부패와 관련한 30개의 Q-samples과 30명의 공직자로 구성된 P-samples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의 유형이 3개로 정의되었다. 즉, <Type I>은 ‘교육행정’ 및 ‘교사’ 등의 공무원 분포가 높았고, <Type II>와 <Type III>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Type I>의 응답자 중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하여 ‘상’의 분포를, <Type II>와 <Type III>는 ‘중’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설명력은 62.11%로 높게 나타났고, 일련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음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용어로 ‘정치/정치인’ 및 ‘청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진단하고 성찰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

■ 중심어 : | 우리나라 | 부정부패 | 공직자 | 주관성연구 | 가설발견 | Q방법론 | 마중물 |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public officials who are most strongly demanded to tear up the corruption and diagnosed what they really think about ‘the corruption’. So,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alled ‘subjectivity study’ or ‘Q methodology’ was used to typing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other words, 30 Q-samples related to corruption and P-samples composed of 30 public officials were investigated to derive the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types of perceptions of corruption were defined. That is, <Type I> showed a high distribution of civil servants such as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eacher’, and <Type II> and <Type III> showed a high distribution of ‘general administrative positions’ civil servants. Also, among the respondents of <Type I>, it was found that the distribution of ‘high’ was higher for the level of corruption in our society, and the distribution of ‘medium’ for <Type II> and <Type III> was found in the case of the respondents with high factor weight. The overall explanatory power was high at 62.11%, and based on the series of results, a hypothesis could be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diff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of public officials’. By the results, the commonly recognized terms for ‘corruption’ were ‘politician/politician’ and ‘solicitation’. Therefore, based on a series of result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Priming’ for finding ways to move toward a more transparent society by diagnosing and reflecting on the thoughts of corruption in our society once again.

■ keyword : | Society | Corruption | Public Official | Subjectivity Study | Hypothesis Abduction | Priming |

\* 본 연구는 2022학년도 충남대학교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22년 06월 30일

심사완료일 : 2022년 08월 18일

수정일자 : 2022년 08월 18일

교신처자 : 이도희, e-mail : 2dohee@hanmail.net

## I. 서론

대한민국은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새로운 대통령은 나름의 신념과 각오로 공약을 선언하였고, 일련의 선언에는 “민주주의 위협 부정부패 내편내편 없이 엄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http://www.dt.co.kr>)[1]. 이러한 정부의 반부패 운동은 어느 정권이든지 꾸준히 전개되어 왔지만, 정치적 목적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여기서의 ‘부정부패(不正腐敗, corruption)’는 사전적 의미로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3].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법률 제6494호)을 제정하였고, 본 법은 2008년 2월 29일에 폐지되면서,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로 새로운 법률명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본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정의), 4항에서 “부패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4].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한편, 2021년 3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슬로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본 협의회에서 대통령은 소속 및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정사회’, ‘반부패’,

1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는 정부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을 두었다. 이후, 2017년 9월 6일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로 개정하고, 2020년 1월 14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으로 개정과 함께 조직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부정부패 척결’과 같은 용어들이 더욱 회자되고 있음은, 우리사회가 그 동안 공정하지 못하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TI)<sup>2</sup>는 각국의 청렴도 인식을 진단하여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CPI는 공무원 및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지수로, 1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문항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하였다. 여기서의 ‘부패인식지수(CPI)’는 ‘①완전 청렴, ②매우 청렴, ③어느 정도 청렴, ④어느 정도 부패, ⑤매우 부패, ⑥완전 부패’의 여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점수의 부여방식은 2011년까지는 0점부터 10점을, 2012년부터는 0에서 100점을 20점 간격으로 구간화하였다. 또한, 국제부패지표인 ‘Global Corruption Barometer(GCB)<sup>3</sup>는 ‘년간 뇌물수수경험이 있는 정도(%)’와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정도(%)’로 구성되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TI의 조사에 의한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CPI는 점수는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180국 중에 32위로 나타났다. 특히, 본 결과에서 1위는 88점으로 뉴질랜드와 덴마크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1994년부터 조사를 시작으로 199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하여, 10여개 기관의 13종류 설문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느끼는지를 계량화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선진국인가에 대한 비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2 국제투명성기구(<https://www.transparency.org>)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NGO)로 1993년 피터 아이겐이 설립했으며 본부는 독일의 베를린에 있다. 집행이사회의 의장이자 설립자인 피터 아이겐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경제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있는 동안에 부정부패가 후진국의 발전을 막는 요인을 주목하면서, 퇴직 후에 국제투명성기구를 설립하였다. 특히, 본 기관에서는 각 국가의 공무원 및 정치인의 부패정도를 진단을 위하여, 괴팅겐대학교의 요한 람스도르프 교수와 국제투명성기구가 CPI를 공동개발하여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3 Global Corruption Barometer(GCB)는 ‘세계부패바로미터’는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가 2003년부터 전 세계의 각국 시민들의 부패 경험을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계량화하여 수치로 발표함과 동시에, 색의 강도(진함과 연함)로써 각 국의 부패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https://www.visualcapitalist.com/wp-content/uploads/2022/02/Mapp-ing-Corruption-in-Countries-Around-the-World-Full-Size.html>).

표 1.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부패인식지수 현황 [5]

년도	순위	부패인식지수*	정부
1995년	27위	4.29	김영삼 정부
1996년		5.02	
1997년	34위	4.29	김대중 정부
1998년	43위	4.2	
1999년	50위	3.8	
2000년	48위	4.0	
2001년	42위	4.2	
2002년	40위	4.5	
2003년	50위	4.3	노무현 정부
2004년	47위	4.5	
2005년	40위	5.0	
2006년	42위	5.1	
2007년	43위		
2008년	40위	5.6	이명박 정부
2009년	39위	5.5	
2010년			
2011년	43위	5.4	박근혜 정부
2012년	45위	56*	
2013년	46위	55	
2014년	44위		
2015년	43위	54	문재인 정부
2016년	52위	53	
2017년	51위	54	
2018년	45위	57	
2019년	39위	59	
2020년	33위	61	
2021년	32위	62	

\*부패인식지수 : 점수가 높을수록 덜 부패하다고 인식. 2012년부터는 ×10을 하여 표시하고 있음.

한편, [표 1]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부패인식지수 변화과정을 나타내고 있다.<sup>4</sup> 역대 정부의 부패인식지수의 결과를 보면, 김영삼정부의 27위가 가장 좋은 평가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동안 높지 않은 수준을 보였으나, 문재인 정부 때의 부패인식지수는 62점으로, 32위로 회복되면서 순위가 상승하여, 향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이렇듯,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각국 역시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6-9], 우리사회 역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그 척결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10-12]. 특히, 이러한 사례

4 국내에서는 통계청에서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 정도를 진단하여 발표하고 있다(통계청, 이나라지표(<https://www.index.go.kr>)[5].

는 신입사원의 오리엔테이션 및 입사프로그램에 기본 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있고, 공직사회에서는 반드시 수강해야만 하는 기본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져 있다[8][11][13]. 즉, 우리사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생활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6][13-15].

따라서, 본 연구는 부정부패에 대한 다각적인 차원의 노력에 대한 일환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의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고찰과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부정부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접하기 이전에, "과연 부정부패가 무엇인가?"의 질문으로 출발하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부패는 긍정적이지 않은 다양한 차원의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부정부패이며, 부정부패라는 단어를 통하여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즉,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을 위하여, '주관성연구(subjective study)'라고 하는 개인의 내면적 인식과 이해에서 출발하는 '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16][17]을 활용하였다. 즉, '주관성연구'는 사회과학연구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일반화를 위한 양적연구를 기반으로 한 객관성연구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양적연구 이전에 개인의 내면의 본질적인 이해와 인식에서 출발하는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방법(method) 이상의 '방법론(methodology)'으로, 'Q-방법론'이라고도 한다[18-20].

[표 2]는 통계적 검증을 바탕으로 한 양적연구인 'R-method'과 질적연구의 'Q-methodology'에 대하여 비교설명하고 있다.

표 2. Q-Methodology과 R-Method[21]

구분	Q-Methodology	R-Method
차원	주관성, Communication, Play	객관성, Information, Work
연구 방법	Self-referent approach, 질적연구방법론	Empirical approach, 양적연구방법
가설	Abduction, 가설발견	Deduction, 가설검증
대상	person, 사람	question, 문항

즉, 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주관성연구의 'Q-methodology'는 향후 객관적 가설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양적연구를 위한 가설을 발견하여 설계하는 가설발견적접근(hypothesis deductive approach)으로, 연구방법(method) 이상의 '연구방법론(methodology)'이라 하겠다[19][21][22].

## 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고자, '우리사회, 부정부패는 [ ](이)다'에서 출발하였다. 즉, 분석을 위하여 부정부패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일련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문(Q-statements)을 확보하여, 최종 Q표본(Q-samples)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Q표본은 다시 응답자 P표본을 선정한 후, P표본으로 부터 Q표본에 대한 응답(sorting)를 수행하도록 하여, 응답결과를 수집하여 최종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일련의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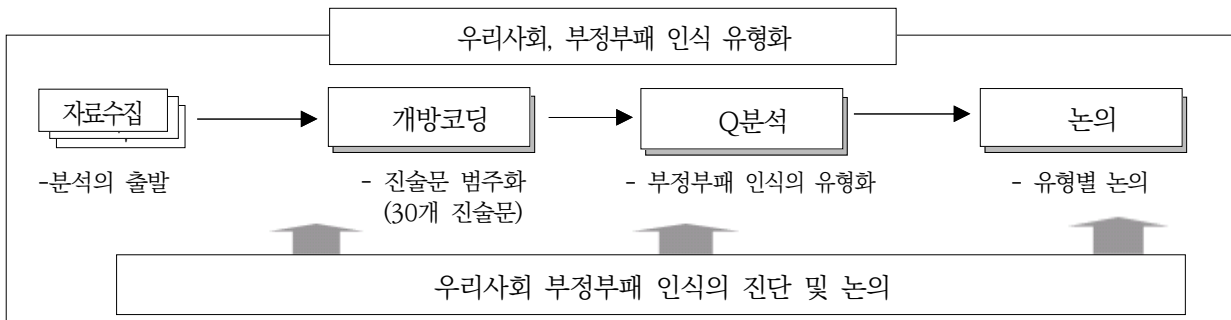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Q분석과정

#### 2.1. Q모집단과 Q표본 선정

부정부패와 관련한 진술문 즉, Q-진술문을 정리하여 최종 선정된 Q모집단은 [표 3]과 같다. 특히, 30개의 Q

표본(Q-sample)<sup>5</sup>은 코딩(coding)<sup>6</sup>과정을 수행하면서 부정부패와 관련한 모집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최종 30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표 3. 영역별 Q표본(30개)

1. 정치/정치인	16. 청탁
2. 경제활동	17. 조직폭력(배)
3. 사법부	18. 공공기관
4. 행정/행정가	19. 경영/회계장부
5. 권력/고위급	20. 윤리경영
6. 선거	21. 언론/방송
7. 공무원	22. 정책/정책실행
8. 윤리교육	23. 기업/기업인
9. 도덕성/도덕적 신념	24. 김영란법
10. 인권/인권보호	25. 방지법/제도
11. 안보/국방	26. 뇌물수수
12. 검/경찰	27. 허위학력
13. 참여연대	28. 권익위
14. 사학비리/특혜	29. 공직혁신
15. 연구윤리/표절	30. 정부조직

#### 2.2. P표본

P표본은 Q표본에 대한 응답자를 나타낸다. 즉,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선정된 30개의 Q표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인 분류과정의 주체인 'P표본'을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과 '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 및 교육행정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이들 공직자들은 나라배움터<sup>7</sup>등을 통하여 '청

5 Q표본(Q-sample)은 분석을 위하여 Q모집단으로부터 최종 추출된 표본으로 일반적으로 statement의 유형으로 "Q-statement"라고도 한다[19][20]. 본 연구에서는 "Q표본"으로 기술하였다.

6 질적연구에서의 코딩은 수집된 자료의 정리과정이다[23].

7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대로 학습할 수 있는 '내 손 안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지향

럼' 및 '부패방지' 관련한 의무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무엇인가를 진단해야 할 필요성으로, 응답자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P표본의 수는 Q표본의 수를 고려하여 같은 수의 30명으로 선정하였다. P표본은 [표 5]에서 제시하고 있다.

### 2.3. Q분류

'Q분류(Q-sorting)'는 응답자인 P표본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30개의 Q표본에 대한 주관적 의견, 인식 등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림 2]에 맞추어 분류하도록 한다.



그림 2. Q분류표

이때의 분류과정은 '강제적 분류(forced distribution)'라는 Q방법의 특성이자 응답자에게 있어서는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즉, 응답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류표에 '강제적으로' 분류해 넣도록 요구받는다. 이 작업은 R방법론에서 수행하는 설문조사와 달리, Q방법만의 고유의 특성으로, 응답자의 신중한 주관적의견을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응답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22][23].

### 3. 자료처리 및 분석

앞서 실시한 Q-sort의 결과를 본 연구에서는 PC-QUANA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30개의 항목(진술문)은 30명의 P-표본을 축으로 Q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및 해석은 각 유형을 구성하는 30개 항목은 표준점수인 Z-Score가 ±1.0을 기준으로 강한 긍정(+1.0이상)과 강한 부정(-1.0이하) 진

공무원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맞춤형 추천, 소통기반 협업학습 서비스, 외부학습자원 제공 등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유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플랫폼이다.

술문을 중심으로 유형을 명명하였고, 각 유형별 진술문을 바탕으로 논하였다.

## III. 분석결과 및 논의

### 1. 유형화 분석결과

#### 1.1. 유형별 설명력 및 응답자 분포

[표 4]는 각 유형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유형 I>은 30.82%, <유형 II>는 22.66%, <유형 III>은 7.74%로 전체 누적변량은 61.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4. 유형별 eigen값과 설명변량

구분	Type I (정치/ 검경찰형)	Type II (뇌물수수/ 정탁형)	Type III (정치청탁/ 김영란법형)
Eigenvalues	15.1943	1.6626	1.5097
Re-ordered %	.3082	.2266	.0774
Cumulative %	.3082	.5348	.6122

[표 5]는 각 유형별 응답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Type I>은 '교육행정' 및 '교사'의 분포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Type II>과 <Type III>은 '일반행정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Type I>의 응답자 중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하여 '상'의 분포가 다른 유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형별 P표본의 특성별 분포

구분	인자 가중치	성별	나이	직업	부패 수준	부정부패 분야
Type I (정치/ 검경찰형) (n=16)	2.2682	F	55	교육행정	상	검찰
	2.0371	M	58	일반행정직	상	사법부/검찰
	1.8249	F	65	교사	중	정치
	1.8044	M	49	교사	중	정치/언론
	1.7933	M	49	교사	중	검찰/언론
	1.7511	M	32	교사	중	정치/검찰
	1.4746	F	39	교육행정	상	정치/기업/언론
	1.3682	F	37	교육행정	중	정치/정치인
	1.3582	F	54	교육행정	상	정치/언론
	1.2244	M	55	교육행정	중	정치/언론/검찰
1.1522	F	35	교사	상	정치/언론인	

	.9613	F	48	교사	중	언론/정치			
	.8908	F	54	교사	중	정치/경제인			
	.8878	F	30	일반행정직	중	정치/언론			
	.8078	M	57	교육행정	중	정치/언론인			
	.5227	M	56	교사	상	정치/언론인			
	2.9354	F	54	일반행정직	중	정치인/기업인			
	2.8392	M	57	일반행정직	중	정치/정치인			
	1.6379	F	28	교사	상	정치			
Type II (뇌물수수/ 청탁형) (n=10)	1.5230	M	34	일반행정직	중	정치/언론			
	1.3298	F	62	교육행정	중	정치			
	1.2297	F	58	일반행정직	중	정치			
	1.0894	F	44	일반행정직	중	정치/기업인/			
	.9957	F	34	일반행정직	상	국회의원			
	.4946	M	36	일반행정직	상	정치/론사			
	.4786	M	52	일반행정직	중	정치/사학			
Type III (정치청탁/ 김영란법형) (n=4)	1.1755	M	33	일반행정직	중	정치인			
	.8501	M	41	일반행정직	상	언론/정치			
	.5103	F	45	일반행정직	중	정치/경제인			
	.2326	F	33	교육행정	중	정치/정치인			

1.2. 유형별 진술문 분포

[표 6]은 전체 유형별 진술문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6]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강조하고 있는 진술문 분포는, <Type I>은 [표 7], <Type II>는 [표 8], <Type III>은 [표 9]에서 기술하였다. 각 유형은 각 유형별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강조되고 있는 진술문을 바탕으로 유형을 명명하였다.

즉, <Type I>은 '정치/정치인', '검/경찰' 등을 강조하고 있고, <Type II>는 '뇌물수수', '청탁', '허위학력' 및 '사학비리/특혜' 등을 강조하고 있다. <Type III>은 '청탁', '검경찰' 및 '정부조직'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과 달리 '김영란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유형별 Q진술문 분포

Q-units	유형	Type I (정치/ 검경찰형)	Type II (뇌물수수/ 청탁형)	Type III (정치청탁/ 김영란법형)
1. 정치/정치인		2.0	1.4	2.3
2. 경제활동		-.9	-.8	.7
3. 사법부		.6	-.2	-.3
4. 행정/행정가		.4	-.7	-1.4
5. 권력/고위급		1.5	1.2	-1.1
6. 선거		-.3	.3	.3
7. 공무원		.1	-.6	-1.3
8. 윤리교육		-1.7	-1.4	.2
9. 도덕성		-1.8	-2.0	-.4
10. 인권/인권보호		-1.3	-1.6	-.4
11. 안보/국방		.5	.1	.3
12. 검/경찰		1.8	.2	1.4
13. 참여연대		-1.2	.1	-1.8

14. 사학비리/특혜	.9	1.4	-.2
15. 연구윤리/표절	.0	.8	-.1
16. 청탁	.8	1.7	1.7
17. 조직폭력배	.3	.8	1.3
18. 공공기관	-.3	-.8	-.9
19. 경영/회계장부	.0	.3	-.8
20. 윤리경영	-1.3	-1.3	-.7
21. 언론/방송	1.0	.2	.2
22. 정책/정책실현	.0	.1	.6
23. 기업/기업인	.7	.3	-1.6
24. 김영란법	-.9	-.9	1.1
25. 방지법/제도	-.7	-.8	-.4
26. 뇌물수수	1.2	1.9	-.2
27. 허위학력	.3	1.4	.0
28. 권익위	-1.1	-.4	-.9
29. 공직혁신	-.9	-.6	.9
30. 정부조직	.2	-.1	1.3

이에, <Type I>을 「정치/검경찰형」, <Type II>는 「뇌물수수/청탁형」으로, <Type III>은 「정치청탁/김영란법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7]은 유형간 상관관계로, <Type I>「정치/검경찰형」과 <Type II>「뇌물수수/청탁형」 간에 .77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유형간 상관관계

구분	Type I (정치/ 검경찰형)	Type II (뇌물수수/ 청탁형)	Type III (정치청탁/ 김영란법형)
Type I	1.00	.77	.29
Type II		1.00	.25
Type III			1.00

2. 각 유형별 Q표본 분포

2.1. <Type I>「정치/검경찰형」

[표 8]은 <Type I>에서 강조하고 있는 Q-표본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Type I>의 Q표본(±1.0 이상)

Q-samples	Z-Score
• 정치/정치인	2.02
• 검/경찰	1.78
• 권력/고위급	1.47
• 뇌물수수	1.18
• 언론/방송	1.04
• 참여연대	-1.24
• 윤리경영	-1.28
• 인권/인권보호	-1.35
• 윤리교육	-1.66
• 도덕성/도덕적 신념	-1.78

즉, 본 유형에서는 '정치/정치인', '검/경찰', '권력/고위급' 등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강조하고 있는 Q표본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차원의 부정부패관련 용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유형을 「정치/검경찰형」으로 명명하였다

2.2. <Type II>, 「뇌물수수/청탁형」

<Type II>는 [표 9]와 같이, '뇌물수수', '청탁', '사학 비리/특혜' 및 '허위학력' 등의 Q표본을 강조하고 있다.

표 9. <Type II>의 Q표본(±1.0 이상)

Q-samples	Z-Score
• 뇌물수수	1.95
• 청탁	1.74
• 사학비리/특혜	1.44
• 허위학력	1.38
• 윤리경영	-1.26
• 윤리교육	-1.44
• 인권/인권보호	-1.59
• 도덕성/도덕적 신념	-1.98

본 유형은 <Type I>에서 강조하고 있는 Q-표본과는 다른 차원의 용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Type I>은 정치 및 정치와 관련된 권력 차원의 용어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Type II>는 '뇌물', '청탁', '비리' 등과 같은 보다 실무적 차원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Type II>를 「뇌물수수/청탁형」으로 명명하였다.

2.3. <Type III>, 「정치청탁/김영란법형」

<Type III>은 '정치/정치인', '청탁', '검/경찰', '조직폭력(배)', '정부조직' 및 '김영란법'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유형의 경우에는 <Type I>과 <Type II>에서 강조하고 있는 용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김영란법'의 Q표본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Type III>을 「정치청탁/김영란법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10. <Type III>의 Q표본(±1.0 이상)

Q-samples	Z-Score
• 정치/정치인	2.30
• 청탁	1.65
• 검/경찰	1.43
• 조직폭력(배)	1.33
• 정부조직	1.27
• 김영란법	1.07
• 권력/고위급	-1.07
• 공무원	-1.27
• 행정/행정가	-1.37
• 기업/기업인	-1.58
• 참여연대	-1.77

3. 논의

3.1. 유형간 일치문항

[표 11]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에 대한 응답결과,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Q-표본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음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관련 인식 용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는 '정치/정치인' 및 '청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윤리경영'은 가장 낮은 표준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정부'기관과 관련한 종사자인 '공무원'임에 따라서, 영리조직과 관련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을 고려할 수 있다.

표 11. 유형간 일치문항(±1.0 이상)

Q-samples	Average Z-Score
• 정치/정치인	1.05
• 청탁	1.00
• 윤리경영	-1.08

3.2. 가설발견의 논거

[표 12]는 분석결과인 [표 4]의 3개 유형별 응답자 P 표본에 대한 개인특성분포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2. 유형간 응답자 분포 차이분석

구분	Type I (정치/ 검경찰형)	Type II (뇌물수수/ 청탁형)	Type III (정치청탁/ 김영란법형)	$\chi^2$
교사/교육행정	14(87.5)	2(20.0)	1(25.0)	13.30 (0.01)
일반공무원	2(12.5)	8(80.0)	3(75.0)	
계	16(100)	10(100)	4(100)	

분석결과, 각 유형별로 공무원의 직무인 '교육행정직'과 '일반공무직'으로 비교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및 교육행정직은 주로 <Type I>인 「정치 및 검경찰형」의 분포가 높고, 청사 및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공무원은 <Type II>인 「뇌물수수/청탁형」과 <Type III>인 「정치청탁/김영란법형」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표 12]의 통계적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계할 수 있다.

**<가설>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즉,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진단한 결과,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의 Q방법론은 객관적 가설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양적연구를 위한 가설을 발견하여 설계하는 '가설발견적(hypothesis abduction)' 접근방법으로, 연구방법(method)이상의 '연구방법론(methodology)'이라 하겠다[21-22][24]. 다만, 본 연구에서의 가설발견적 접근의 '주관성연구'는 '주관성'이라고 하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화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 한계의 보완을 위한 실증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3.3. 부정부패에 대한 논거**

본 연구에서는 'Q방법'이라고 하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준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의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응답자들에게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수준에 대하여 '상', '중',

'하'로 응답을 요청하였고, 특히 부정부패의 분야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응답 분석결과, 부정부패수준은 '상'과 '중'의 분포만 나타났고, '하'의 응답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부정부패 분야에 대하여는 '정치' 및 '정치인'이 가장 많은 응답수를 나타냈고, '언론' 및 '검찰' 등도 높게 나타났다. 즉, 공직에 있는 응답자들은 그들 나름의 공직생활에서의 경험으로 느끼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의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정치', '검찰' 및 '언론' 등에 대한 이슈와 사회문제가 반영된 응답결과임을 고려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은 부정 및 부패에 대한 척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10][12], 대한민국 역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그 척결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27][28]. 특히, 이러한 사례는 신입사원의 오리엔테이션 및 입사프로그램에 기본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고, 공직사회에서는 반드시 수강해야만 하는 기본 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져 있다[8][11][12].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이 그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효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이해(thinking)'와 '인식(perception)'이 바로서야 한다 [29][30]. 더불어 법제도적 차원의 프로그램[31-33]에 대한 보다 체계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인류가 '사회'라고 하는 조직단위를 형성하면서, 그 조직단위가 운영 및 관리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존재해왔던 '부정부패'에 대한 이해의 진단을 수행하였다. 부정부패는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고려해야 할 필요악의 요소는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존재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일련의 분석을 위하여, '주관성연구' 또는 'Q방법론'이라고 하는 개인의 내면적 인식과 이해에서 출발하는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분석을 위하여, '부정부패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



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련의 자료수집에서 확보된 Q-statements는 연구의 핵심요소가 하겠다. 이러한 Q-statements는 최종 활용가능한 Q-samples를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최종 30개의 Q-samples를 확보하고, Q-samples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주체는 응답자 P-samples를 공무원 및 준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된 응답은 PC-QUA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정부패 인식에 대하여 응답자를 유형화하여 최종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화 분석결과, 3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다. 즉, <Type I>은 '교육행정' 및 '교사' 등의 공무원 분포가 높았고, <Type II>과 <Type III>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Type I>의 응답자 중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하여 '상'의 분포가 다른 유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유형의 설명력은 <Type I>이 50.65%, 및 전체 62.11%를 나타냈다.

둘째, 각 유형별 진술문의 분포를 바탕으로 각 유형에 대한 명명을 실시하였다. 즉, <Type I>은 '정치/정치인', '검/경찰' 및 '권력/고위급'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검경찰형」으로 명명하였다. <Type II>는 '뇌물수수', '청탁' 및 '사학비리/특혜' '허위학력' 그리고 '정치/정치인' 등을 강조하고 있어, 「뇌물수수/청탁형」으로 명명하였다. <Type III>은 '정치/정치인', '청탁' 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다른유형보다 '김영란법'을 강조하고 있어, 「정치청탁/김영란법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유형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Type I> '정치/검경찰형'과 <Type II> '뇌물수수/청탁형' 간에 .77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진술문으로는 '정치/정치인' 및 '청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정치분야의 사회적이슈임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서 추출된 각 유형별 응답자의 특성 및 진술문 분포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가

설을 발견 및 설계함으로써, Q방법론이 '가설발견적 접근방법'으로써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가설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 주장이 가능한 가설검증의 실증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일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부정 및 부패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 일상에서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기획] 윤석열 "민주주의 위협 부정부패 내편내편 없이 엄단,"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
- [2] 김철식, *공무원신뢰와 부정부패*, 소통과공감, 2014.
- [3] 위키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
- [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 [5] 통계청, *이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 [6] 강명원,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계약방식, 낙찰기준, 부정부패방지, 계약변경 관련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계약연구*, Vol.9, No.2, pp.3-26, 2018.
- [7] 민경선, "중국과 인도의 부패방지 수사기구(공수처)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2, pp.123-144, 2020.
- [8] 이우진, "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4, pp.27-54, 2021.
- [9] 박세훈, "부패방지를 위한 미국의 암묵적 서약 이론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4, pp.55-81, 2021.
- [10] 박규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3, pp.75-92, 2018.
- [11] 김병수,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2, pp.107-121, 2020.
- [12] 김종세,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강화 방안,"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2, pp.5-23, 2021.
- [13] 이인재, 이철주, 노희정, "국외 초·중등학교 청렴교육의 실태와 현황 분석," *한국부패학회보*, Vol.22,

No.2, pp.51-73, 2017.

[14] 이정주, “반부패·청렴업무 전담기구로서의 국민권의 위원회의 위상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3, pp.141-166, 2021.

[15] 최혜민,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

[16] W. Stephenson, “Scientific Creed. Philosophical Credo,” *The Psychological Record*, Vol.11, 1961.

[17] W. Stephenson, “Consciousness Out-Subjectivity in,” *The Psychological Record*, Vol.18, 1968.

[18] R. S. Brown, *Political Subjectivity*, New Haven, Mass.: Yale University Press, 1980.

[19] 김흥규,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간호학논문집, Vol.6. No.1, pp.1-11, 1992.

[20] 김흥규, *Q방법론: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선북스, 2008.

[21] 이도희, 이동규,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비영리회계 인식의가설 발견적 접근,” 회계와정책연구, Vol.12, No.1, pp.281-308, 2007.

[22] 유영설, 이도희, “경영교육, 나눔경영을 위한 ‘기부’를 생각해보다!: Q방법론을 활용하여,” 경영교육연구, Vol.36, No.3, pp.155-174, 2021.

[23] 조홍식 역, *질적 연구방법론(4판):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21.

[24] 염성수, 이도희, “관리회계연구에서의 질적연구방법론 활용 방안,” 회계와 정책연구, Vol.19, No.5, pp.1-36, 2014.

[25] 이도희, 주정아, “장애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Q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9, pp.493-501, 2021.

[26] 최재석, 이도희, “빅 데이터!,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스포츠실무자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5, pp.149-156, 2021.

[27] 이호선,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법과 정책연구, Vol.22, No.1, pp.357-382, 2022.

[28] 이종복, “자치경찰 시대 한국 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1, pp.51-96, 2022.

[29] 최혜민,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구원 기본연구과제, 2021.

[30] 최태홍, 김선경, “Q방법론을 활용한 나라장터 이용자의 인식유형 연구: 부패행위 발생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Vol.24, No.4, pp.109-135, 2021.

[31] 장재성, “효율적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선 방안,” 한국부패학회보, Vol.24, No.3, pp.5-24, 2019.

[32] 정신교,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3, pp.27-47, 2021.

[33] 민경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소고,”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1, pp.81-100, 2021.

저 자 소 개

이도희(Doh-Hee Lee)

정희원



- 2022년 8월 : 충남대학교 강사
  - 2022년 8월 :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초빙교수
  - 2021년 8월 : 공주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학전공
  - 2012년 8월 :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법학석사 특허법무학전공
  - 2005년 8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박사 관리회계전공
  - 2005년 2월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전공
  - 1994년 8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석사 회계학전공
- <관심분야> : 관리회계, 정부 및 비영리회계, 회계윤리, 법학,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양적, 질적)